



밀밭의 초록 추억 28일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에서 열린 광산 우리밀 문화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우리밀밭 사이길을 거닐며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해 광산지역 우리밀 생산량은 국내 전체(3만2000t)의 25%를 차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3년내 귀농 1만가구로”

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 유치 총력전

전남도가 귀농(歸農)·귀촌(歸村) 가구 늘리기에 총력을 편다. 전남도는 29일 “지난해 말 780가구 수준인 귀농인을 2014년까지 1만 가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감소를 막고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올해 1500가구를 전남으로 끌어들이고 ▲2012년 2000가구 ▲2013년 2500가구 ▲2014년 4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귀농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50~1960년대생 세대의 은퇴시기까지 맞물려 향후 귀농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가

능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내 귀농 인구는 지난해 768가구로 2009년(549가구), 2008년(289가구)에 이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1112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유치 전략도 내놓았다. 시·군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퇴직 예정자들이나 연고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여는 ‘찾아가는 귀농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남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고향길 갖기 운동’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귀농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영농기술 책자 발간’을 발간해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에 ‘귀농 종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고 ‘인터넷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농가주택이나 농지, 축사, 농기계 구입 등에 도움을 준다. 계획도 세워놓았다. 농업기술원에 귀농 설계부터 영농기술, 경영컨설팅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귀농자 성공사례 발굴 및 후견인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시민 농촌에 유치가 적극 나서 200만 인구를 회복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축銀 비리 ‘권력형 게이트’ 비화

MB 대선캠프 출신 은진수 소환 조사 전·현 정부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이명박(MB)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MB 정부 후반기 첫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또 저축은행들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세 확장을 위해, 현 정부에서는 비리 무마와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 전 위원은 물론 몇몇 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사를 마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축은행 발 ‘게이트 공포’가 여권을 뒤덮고 있다. 차관급이었던 은 전 위원이 감사원

의 감사 무마나 퇴출지지 청탁을 실행에 옮겼다면 그의 청탁을 받은 금융당국이나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불뚝이 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스트이자 은씨에 대한 로비 사실을 털어놓은 금융브로커 윤여성씨(구속)의 입에서 또 다른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은씨는 금품수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행했다. 은 전 위원 금품수수 의혹이 나오자 “현 정부 임기 중에 게이트는 없다”던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허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에 이번 사건이 4·27 재·보궐선거로 촉발된 MB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또 이미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의 경우 부산·경남 지역, 민주당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과 함께 고위 공직자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박 회장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에 대한 세부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공감대 속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저축은행 국조’는 말 그대로 시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시점과 타격을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 실제 착수하기까지 논란이 불거져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와 겹치면 혼선이 가장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할 태세다. 6월 국회에서 시작하자고 여권을 압박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JCI亞太대회 광주 개최

30여국 2만여명 참석...역대 최대 국제행사

2013년 제63회 JCI(세계청년회의) 아시아태평양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1년 JCI 아시아태평양 대회 총회에서 2013년 제63회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은 29일 마닐라 JCI 총회에 들러 칸타로 하라다 세계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 가장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해 광주 유치를 이끌어 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광주JC의 유치신청서 제출을 지원하고 2009년 일본 나가노 대회, 2010년 싱가포르 대회와 올해 마닐라대회 등에 직접 참석해 유치활동을 펼쳐 왔다. JCI 아시아태평양대회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아태지역 30여 국가에서 2만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국가간 문화교류와 회원 상호 간 우호증진을 위해 총회, 세미나, 참가국 홍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여수서 내년 세계해양·기상학 총회

5월 23일부터 9일간...박람회 시너지 효과 기대

세계기상기구(WM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해양학·해양기상학 합동 기술위원회(JCOMM) 총회가 내년 5월 여수에서 개최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유치가 확정됐으나 JCOMM 총회와 정부의 외교적 입장 차이로 철회위기에 놓였다. 이에 김충석 여수시장은 전남도와 조직위, 한국해양원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개최 의지를

기상청에 전달해 지난 26일 총회 개최를 최종 확정지었다. 4년마다 열리는 JCOMM 총회는 각국의 정부대표단이 참가해 각국에서 발생한 해상 자연재난, 해양 기후 변화 등에 대한 활동을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내년 제4차 JCOMM 총회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인 2012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박람회장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참여된 워크숍도

함께 열려 해양과 기상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JCOMM 총회는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물론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출범

5+2광역경제권이 만드는 잘사는 지방!

왜 <5+2광역경제권>인가? 뭉쳐야 ‘더 큰 시장’이 생깁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이 하나로 뭉쳐 ‘더 큰 지방’을 만듭니다
- ※ 5+2광역경제권(MB정부 대표지역정책) =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5) + 강원권·제주권(2)

핵심은 <연계·협력>이다 ‘시·도간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 시·군·구 - 시·도 -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듭니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지방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 지방주력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더 잘 사는 지방’을 만듭니다

잘 사는 지방이 키우는 「더 큰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